

# III 전태일 이후의 III III 노동·경제 50년 III



우리가 풀지 못한 역사적 난제와  
노동자운동의 현재적 과제



민주노조운동의 중요한 행사들은 항상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과 함께 했다. 사진은 전노협 건설의 시작이 된 1988년 11월13일 전국노동자대회(왼쪽), 민주노총 건설을 결의한 1995년 11월 11일 대의원대회이다.

# 전태일 이후의 노동·경제 50년

우리가 풀지 못한 역사적 난제와

노동자운동의 현재적 과제

서문: 50년 된 문제제기	4
한국사회 모순의 뿌리: 1970년의 위기와 전태일	6
민주당은 전태일의 친구였을까?	11
재벌체제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16
전태일 이후 노동운동 1 계급타협과 계급전쟁 사이	22
전태일 이후 노동운동 2 임금과 고용 격차는 어떻게 커졌는가?	29
임금·고용의 연대로, 전태일 정신 계승!	34

## 서문: 50년 된 문제제기

이 소책자는 지난 50년간의 한국 사회 변화를 전태일을 키워드로 삼아 설명합니다.

전태일 열사는 가난한 사람 앞에 한없이 불공정했던 법에 항의해 법전을 끌어안고 분신했습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여당의 유력 인사는 ‘초엘리트’만의 세계가 따로 있다며 조국 씨의 부정의는 불법이 아니라고 뿔뿔하게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업자는 극소수이지만 파업으로 처벌받는 노동자는 여전히 부지기수입니다. 권력자와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법질서는 모습을 달리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청계천 봉제공장은 박정희가 수출을 위해 저임금 노동을 쥐어짜던 최말단 하청 공장이었습니다. 한 달에 많아야 이삼일 쉬며 간신히 먹고 살 만큼의 임금만 받았죠. 이 모든 것이 수출입국(輸出立國)을 위해 강요되던 것이었는데요. 지금도 이런 경제 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두 배 넘는 임금 격차, 다수 하청기업을 수탈해 소수 대기업만 부를 축적하는 산업구조로 이어집니다. 산업재해로 매년 2천 명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2020년의 현실은 천

장 높이가 1.5m도 되지 않는 비좁은 다락방에서 하루 15시간 일했던 1970년대 청계천의 노동조건과 본질적 면에서 같습니다.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노동자의 생활이 많이 나아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1970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소위 30-50클럽의 7번째 멤버입니다. 하지만,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어일 정도로 한국의 노동자는 전반적으로 불행합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노했던 사회 문제들이 2020년의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한국 사회는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요구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경제, 제도, 운동의 역사를 분석해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이 소책자가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을 외치는 2020년의 노동자운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한국사회 모순의 뿌리: 1970년의 위기와 전태일



1972년 8월 박정희는 모든 기업의 사채를 동결한다는 긴급명령을 발표했다. 1970년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을 하락과 무리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 한국경제는 부도 직전의 위기로 내몰렸다. 1970년의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착취도 이러한 정책 실패의 결과 중 하나였다.

1970년은 반공체제, 군부독재, 경제개발 모두가 위기에 빠진 시기였다. 당시 위기는 중화학공업 위기, 재벌 정경유착,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현재도 그 형태를 달리해 이어지고 있다.

1970년은 한국 현대사의 분기점 중 하나였습니다. 반공, 독재, 경제개발이라는 해방 이후 체제의 핵심 요소가 모두 위기에 빠졌던 탓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후대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11월의 전태일 열사 항거도 이 분기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전쟁 이후 국시로 불린 ‘반공’ 체제가 큰 위기에 닥쳤습니다. 1969년 7월 발표된 닉슨 독트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늪에 빠진 베트남 전쟁의 출구 전략을 찾고 있었는데요. 1969년 취임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 각국은 내란이 발생하거나 침략을 받으면 스스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아시아로부터의 철수를 언급합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감축도 함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을 국방력의 핵심으로 삼았던 박정희 정권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이런 변화에 ‘자주국방’ 강화로 대응했습니다. 미국의 냉전 완화 전략에 남북 간 긴장 완화로 적응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이러면 정권의 안위가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 장면 정부를 무너뜨릴 때 박정희 군부가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반공에 유능한 정부였기 때문이죠. 장준하 같은 재야인사조차 반공에 필요하다며 군부 쿠데타를 지지했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박정희의 자주국방 노선은 세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했습니다.

첫째, 산업고도화 차원에서 추진되던 1960년 후반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군수산업에 필요한 중화학공업화 전략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철강, 화학, 기계, 조선, 자동차 같은 중후장대 산업이 동시

에 육성된 것인데요. 이들은 엄청난 자본투자가 필요한 데다, 선진국 기술추격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더구나 수출이 필수적인데 1970년대는 세계적 경제침체 국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패착이었죠. 이로 인해 1979-80년 국가 경제가 한꺼번에 침몰할 뻔한 심각한 경제침체와 1997년 한국경제를 근본적으로 뒤바꾼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중화학공업은 이때부터 육성된 것입니다.

둘째, 군수 주도 경제에서 정경유착이 더 심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업들은 정부가 정해진 군수 관련 산업에 투자하면 거의 공짜로 정책자금을 가져다 쓸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정책자금을 벌리기 위해 정권 핵심에 정치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묻지마 투자를 하니 중복 과잉투자와 비리가 만연했습니다. 기업 부실도 당연히 커졌습니다. 적산불하로 시작된 정경유착이 이때부터 더욱 심화했는데요. 특히 중화학공업을 전담한 재벌의 정경유착이 지금까지도 한국경제에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셋째, 저임금 노동착취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박정희의 빛나는 업적처럼 과장되어 있지만, 중화학공업은 198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경제의 큰 결함이었습니다. 정책자금으로 덩치만 커졌지, 수익성이 높지도 않았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3저 호황 전까지는 가동률이 70%를 넘는 업종이 소수일 정도로 제대로 작동되지도 못했는데요. 박정희 정권은 이런 중화학공업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노동 집약적 수출산업에서 노동자를 더욱 쥐어짖었습니다. 1970년은 물론이거니와 1970년대 말까지도 한국의 5대 수출품 중 4개가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던 경공업이었습니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출 달러로 중화학공업 손실



을 배우는 게 1970년대의 경제였던 셈입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이후 한국 사회에서 관행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깁니다.

군수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박정희 정권은 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성장에 적합한 변화보단 군사 정권의 특기인 대국민 억압을 선택한 것인데요. 1969년 9월 3선 개헌을 밀어붙였고, 1971년 12월에 ‘국가보위에관한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10월에는 유신 개헌으로 항구적 독재의 길로 나갔습니다. 전태일이 ‘바보회’를 결성하고 근로조건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던 시기는 박정희가 역으로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군수산업과 독재라는 최악의 방법을 선택한 박정희 정권은 1970년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 사업을 여럿 벌입니다. 4월에는 선진국 경제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포항제철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7월에는 정부고속도로도 착공했지요. 포항제철, 정부고속도로는 한국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후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상 당시의 정책은 1979-80년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보면, 경향신문이 보도해 화제가 됐던 전태일 열사의 1970년 9월 근로조건 개선을 요청하는 노동청 진정서는 당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경고하는 알림음이었다는 것도 같습니다.

한편, 당면 사회의 문제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자신의 정당성이나 의지를 앞세워 정책을 추진하는 행태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이니, ‘한국형 뉴딜’이니 하는 정책이 그런 사례라 하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그들 스스로

가 더는 말도 꺼내지 않는데요. 한국형 뉴딜도 곧 그런 운명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희와 그 후예들을 정적으로 여기는 현 집권세력은, 역설적이지만, 박정희의 1970년대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일이 분신으로 폭로했던 1970년은 반공체제, 군부독재, 경제개발 모두가 위기에 빠진 퍼펙트스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당시의 모순들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복해서 위기에 빠지는 중화학공업, 재벌의 정경유착, 저임금 장시간 노동 관행, 비과학적 정부 정책 등이 그러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이란 그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결할 수는 없었던 이 문제들을 오늘날의 노동운동이 해결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책자의 뒷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당은 전태일의 친구였을까?



민주당의 실제 정책은 그들의 친노동 이미지와 달리 노동유연화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사진은 1997년 김대중 당선자가 IMF 캄드쉬 총재와 만나는 장면. 김대중 정부는 되려 미국이 우려할 정도로 해고와 비정규직 자유화를 빠르게 밀어붙였다.

50년간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는 노동운동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봤고, 여당 시절에는 노동운동을 배신해 집권세력으로 균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작년 49주기에는 “열사 정신 계승”을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매년 기일이 되면 전태일 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태일 누나인 전순옥 씨는 2012년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비례 1번으로 국회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전태일 열사에 대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친노동 이미지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0년 역사를 따져보면, 민주당과 노동운동의 관계는 그야말로 악연이었습니다.

현 민주당의 친노동 이미지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신민당)가 1970년 11월 말 전태일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 해 대선에서 친노동으로 평가받는 ‘대중경제론’을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노동자 편을 들면 ‘빨갱이’라는 낙인찍히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는 대범한 도전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정책이 실제로는 작동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박정희의 수출 대기업 중심 정책을 수입대체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대중경제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입대체는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 이미 20세기 초중반 실패로 검증된 것입니다. 중소기업 중심 역시 대만 같은 국제 분업구조 상의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지 않는 한 공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경제정책에 대한 적합한 비판은 앞장에서 봤듯 무리한 군사적 중화학공업화의 폐해를 개혁하는 것이었어야 했는데요.

이미지만 친노동일 뿐 현실에서 작동 불가능한 그의 정책은 후에 그가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김대중은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된 후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가 있었다고 자평하

며, 미국이 보기에도 너무하다 싶은 노동유연화를 밀어붙였습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가 적절한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데도 김대중으로부터 시작하는 현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1987년 야권 단일화를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은 1986년, 1987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대선 출마 포기 약속을 했지만, 이를 뒤엎고 당시 야권의 중심이었던 통일민주당을 탈당해 독자 출마를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전두환 후임인 노태우의 당선이었습니다. 군부 정권의 연장은 노동운동에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노동운동 성장에 걸맞은 노동법 개정이 지연되었고, 군부와 재벌의 협공으로 가까스로 성장하던 초기업노조 운동이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노동운동은 1988년 지역별노동조합협의회(지노협)를 건설하며 빠르게 기업별 노조 체계를 벗어나 전국적, 산업적 조직과 제도적 변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국회도 제3자개입금지 폐지, 파업권 보장 등 노동기본권을 정상화하는 노동법 개정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노태우 당선으로 인해 노동법 개정은 물거품이 됐고, 노동운동의 초기업적 운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12월 마침내 집권에 성공한 김대중은 취임하기도 전에 국가 부도를 협박하며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해고와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는데요. 더불어 노사정 교섭구조의 첫 시작을 망쳐놓아 지금까지도 노동자들이 노사정 교섭에 트라우마를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김대중만의 민주화가 노동운동의 성장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와 2004년 다수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임금과 고용의 격차를 고착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개혁의 기수를 자처했지만, 그 개혁은 금융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였을 뿐이었죠. 청와대와 여당은 노동운동보다 오히려 삼성과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이때는 군사독재 시절만큼 노동자가 많이 죽어나기도 했습니다. 임금 격차와 비정규직 증가도 노무현 집권 시기가 산업화 이후 가장 컸습니다. 물론 이들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초기업적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개혁에 대해서는 보수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전형적인 노동자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박근혜 탄핵의 결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내걸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추진한 최저임금1만원은 결국 각종 부작용과 최저임금에 대한 회의감만 남겨놓고 중단된 상태고, 비정규직 문제도 가시적 수치에만 집착하다 공정성 논란과 노노갈등만 키워놓았습니다. ILO협약비준은 파업권 제한을 은근슬쩍 포함해 독이 든 사과로 국회에 넘어가 있고, 야당 시절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약속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친위부대를 자처하며 권력 연장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50년간 민주당의 일관된 태도는 야당 시절에는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 노동운동의 편에 서지만, 여당이 되면 노동운동을 배반하고 심지어 침묵시키며 권력 유지에 집중합니다. 민주당은 전태일의 친구가 아니라 등골을 빼먹는 사기꾼이라 불려야 합니다.

## 재벌체제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재벌 총수들을 모아놓으면 조폭 뺑치는 '별들의 잔치'가 된다. 재벌 총수 중 감옥에 다녀 오지 않은 사람이 소수일 정도다. 정경유착과 노동탄압의 역사는 1970년대부터 본격화 됐다.

재벌과 임금·고용 격차는 2020년대 한국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난제이다. 전태일은 이 두 문제가 중첩되는 한 복판에 있었다.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봉제공장은 가장 열악한 일터였지만 동시에 1970년대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초 스웨터, 면직물 같은 섬유제품의 수출 비중은 40~50% 정도로 높았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0~40%로 컸습니다. 화학, 금속, 기계류의 경우 수출 비중은 10~20%,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여성 노동자를 쥐어짜 중화학공업 육성에 쏟아붓고 있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런 희생을 배경으로 성장한 수출 기업은 과실을 노동자들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화학공업 계열사를 거느리고 성장한 수출 재벌은 부의 독점, 부패, 무능으로 50년간 한국경제에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재벌 1세대는 해방 이후 정경유착으로 적산을 헐값에 불하받아 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공짜에 가까운 원조물자를 가공해 큰돈을 번 후, 그 돈으로 다른 기업들을 인수해 계열사를 늘렸습니다. 특히 재벌이 오늘날의 형태를 갖춘 것은 1970년대 박정희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군수 중화학공업을 육성한 정부는 중화학공업 기업에는 저리로 특혜 대출을 제공했고, 재벌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문지마 투자로 중화학공업 계열사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대출 받은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정경유착도 심해졌는데요.

1980년대 중반까지 재벌그룹의 중화학공업 기업들은 선진국 기술 모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기업이 잘 굴러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와 일본기업과의 경쟁력 격차로 좀처럼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중화학공업 계열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은 1980



년대 중반 3저 호황 이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재벌의 규모가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3저 호황으로 위기를 극복한 후 재벌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문어발식 확장을 재개했습니다. 재벌들이 이때 특히 집중한 업종은 금융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은 금융계열사를 통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는데, 재벌들은 이 돈으로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1996년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총 767개 이를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재벌들의 사업 확장은 수익성 하락을 오히려 가속했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부실 투자였을 뿐이었는데, 재벌의 막무가내 확장이 정점에 달한 1994년부터는 단기외채도 급증했습니다. 1993년 110억 달러에 불과했던 단기외채가 1994년 1년 만에 200억 달러로 증가하더니 1996년에는 400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97년 말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외환위기는 위기의 책임자인 재벌들에게 채도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는 부실 재벌을 해체해 우량 계열사들을 다른 재벌과 초국적기업에게 넘겼고, 재벌 간 빅딜로 소수 재벌의 산업 지배력을 심화시켰으며, 부실채권 정리로 재벌의 부채를 떠안았고, 재벌들이 쉽게 임금과 고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규제도 완화했으며, 심지어 족벌경영체제를 안정시켜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환위기에 살아남은 재벌들은 2000년대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2001~17년 기간 30대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는 440조 원에서 1,740조 원으로 4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다만, 자본 규모의 성장에도 불

구하고 고용은 많이 늘지 않았는데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국내 생산도 대대적으로 외주화한 결과였습니다. 1995년 30대 기업집단의 전체 취업자 대비 종사자 수는 4.8%였는데 2017년에는 경제적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음에도 고용 비중은 4.4%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경영권 세습은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재벌은 피라미드식 대기업을 특징 가문이 경영권 세습을 통해 지배합니다.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은 총수 가문의 승계자가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을 경영하는데, 이는 국민 모두를 큰 경제적 위협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기업의 자원을 멋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라 경제의 효율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재벌이 1960~80년대 추격성장 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한 과감한 투자와 총수의 의지로 움직이는 빠른 결정이 선진국을 모방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벌은 경영권 세습과 부패로 인해 나라 경제를 위협에 빠뜨리는 폭탄이기도 했습니다. 1979년 위기, 1997년 국가부도가 대표적이었죠. 더불어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2천 년대의 한국경제에는 위협을 관리하면서 혁신에 도전하고,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지속 가능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세습적 족벌 경영체제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각국의 체도를 비교하는 경제학 연구들은 추격성장 시기의 체도를 혁파하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경우 재벌 지배구조가 그런 혁파되지 못한 추격성장기의 대표적 체도입니다.

재벌의 문제점은 기업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치와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재벌이 정치에 미친 피해는 금권정치입니다. 재벌은 독재정권 하에서는 군부의 폭력에 눌려 정권의 하위파트너로 존재했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선거 정치의 약점을 이용해 역으로 정부와 의회를 금권으로 지배하려 들었습니다. 재선을 위해 돈이 필요한 정치인들에게 비자금을 제공했고, 심지어 재벌 장학생이라 불리는 정치인들을 육성해 개혁, 보수 가리지 않고 대리인으로 삼았습니다. 소수 지분으로 거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 일가에게 시장 제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업경영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재용과 박근혜가 2015년에 벌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경유착은 이런 금권정치의 가장 생생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재벌은 모든 방법을 이용해 제도를 포획해야만 하고, 정치권은 재선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집할 필요가 있는 한, 금권정치가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양자 모두가 금권정치에 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가 특권을 위해 이용되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금권정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실패한 개발도상국들의 전형적 특성입니다.

금권정치가 재벌과 정치의 의도적 결합이라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재벌과 노조의 결합이 만든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기업별 노조체제로 수렴하면서, 지불능력이 상당한 재벌계열사에서는 임금인상에 성공한 노조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민간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했는데, 재벌에 포획된 정

치권이 초기업노조를 억압하며 재벌이 기업별 노조 밖에서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벌은 1990년대부터 노조를 회피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대대적으로 늘리며 무노조 저임금 상태의 노동자를 착취해왔습니다. 1987년 이후의 민주노조 운동은 아쉽게도 이를 뛰어넘을 만큼 유능하게 대처하지는 못했습니다. 재벌 대기업을 경계로 지불능력 격차도 큰데, 여기에 더해 노조 조직률 격차까지 더해졌으니 임금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족벌경영과 지속해서 커지는 임금·고용 격차는 2020년대 한국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난제입니다. 다만,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인데, 1970년 전태일은 이 문제의 한 복판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2020년의 전태일 정신 계승은 바로 재벌과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 전태일 이후 노동운동 1

## 계급타협과 계급전쟁 사이



한양대 전태일 기념제에서 단상에 등장한 전노협 깃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88년 11월 노동자대회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을 전면에 내걸었다. 노동운동은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 그리고 정권과 재벌의 분할 관리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힘을 합쳐 노동자의 계급적 진출을 도모하려 했다.

한국전쟁 이후 노동운동은 전태일 열사의 항거가 시작점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전태일 덕분에 “근로기준법이란 보물 지도”를 발견했고, 노동조합이란 무기도 찾아냈습니다. 1970년 청계피복노조 결성을 시작으로, 신진자동차(1971), 삼원섬유(1973), 반도상사(1974), 콘트롤데이타(1974), YH(1975) 등에서 신규노조가 건설되었고, ‘한국모방(원풍모방)(1972), 동일방직(1972,1976)’ 등에서는 어용노조가 민주화됐습니다. 그리고 1979년 8월에 있었던 YH무역 여성 노동자 투쟁은 김영삼 의원 제명 사건, 부마항쟁, 10.26 사태로 이어지는 박정희 정권 몰락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노동운동은 전태일이 간절히 원했던 사회변화를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운동은 인권 보호 수준의 종교계 운동과 개별 사업장에서의 처우개선 투쟁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당대 지식인들은 정권의 억압에 눌려있었고, 더구나 반공주의에 쩌들어 있기도 해서, 노동자계급의 운동에 무관심했습니다. 노동운동이 어떤 사회를 향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고민하기에는 당대 사회조건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도전하는 노동운동은 1985년 구로 동맹파업을 거쳐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노동자들은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파업을 조직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단 3개월 사이에 17%에서 23%로 뛰었고, 1987~90년 4년간 실질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10%에 달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들고일어난 직접적 계기는 정부와 기업들의 파렴치한 탐욕 탓이었습니다. 1986년 말부터 뉴스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 보

도되었지만, 노동자들의 체감경제는 엄혹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임금을 계속 통제했습니다.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던 현대 정주영 회장은 1987년 연초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5~7% 정도의 임금인상만 고려한다고 발표해 노동자들의 불만에 불을 질렀습니다.

한편, 정부와 재벌은 노동자대투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전두환은 6월 항쟁이 수습 국면에 들어선 8월 말부터 대대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했고, 노태우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불법 노사분쟁에 대한 강경대응을 선포했습니다. 1989년 2월에는 국회를 통과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거부권도 행사했죠. 임금가이드라인정책도 재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재벌은 왜 이렇게까지 노동조합 탄압에 힘을 쏟았을까요? 따져보면, 당시 우리나라 정세는 자본과 노동의 타협에 우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우선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 수익성은 지속해서 상승했습니다. 파업이 격화되는 것보다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는 것이 오히려 자본가에게 이득일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상황도 타협에 우호적이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1988년 총선에서의 야당 승리로 사회적 대타협 같은 것이 필요했던 시기였으니 말입니다. 1988년 국회에서는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노동조합들도 1988년 하반기에 전국적 수준의 조직을 꾸려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1970년 전태일 당시와는 천지 차이의 상황 변화가 있었던 셈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정부가 마음만 먹었으면 노동법 개정을 매개로 노사관계를 제도화, 안정화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재벌은 타협을 택하지 않았는데요. 노동조합 운동이 계급적 타협을 할 만큼 체제 유지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자본가들에게 임금인상의 비용은 감당할만한 것이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자본가에게 대단한 비용은 사실 체제 유지가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비용일 텐데요. 자본가가 전쟁 대신 타협을 내놓아야 했던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보면 이 상황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예로 독일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로 불리는 제도는 이사회 의 절반을 노동조합이 채우게 되어 있는데요. 경영 관련 요구로 과업하면 불법이 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큼니다. 독일의 이런 노사타협체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1945년 나치가 붕괴한 후 국가경제의 탈나치화, 공동소유, 공동결정, 계획경제 기반의 기간산업 사회화 등을 기본 방침으로 세웠는데요. 그런데 독일 자본가들 대부분은 나치에 협력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경제의 ‘탈나치화’는 이들에 대한 처단을 의미했습니다. 더군다나 독일을 분할 통치하던 연합국(미국, 영국, 프랑스)도 나치에 협조한 독일 자본가들을 불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자본가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자본가들은 경영권 일부를 노동자에게 양보하고, 노동조합을 국가 재건의 중요한 파트너로 삼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 붕괴의 비용보단 타협의 비용이 썼던 셈입니다. 요컨대, 독일의 계급타협은 자본가의 선의 덕분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사상과 급진적 요구, 그리고 조직력이 자본가들의 체제에 너무나 위협적이었기 때문



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스웨덴을 예로 보겠습니다. 스웨덴의 노동조합은 20세기 초부터 조직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자본가들은 노동법을 개악하고 노조 탄압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발합니다. 러시아 인근에 있던 스웨덴은 곧바로 혁명의 영향권 하에 놓였는데요. 노동자들은 러시아 혁명에 영감을 받았고, 자본가들은 스웨덴 노동자들이 러시아와 동맹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스웨덴노총과 전략적 관계인 사민당은 1920년부터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며 집권 정당이 되었습니다. 사민당에는 생산수단 사회화, 국유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총은 '사회주의 정신'에 입각한 임금균등화 정책(연대임금)을 자본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자본가들은 노총의 요구를 수용해 노동자의 대표와 노동자 전체를 포괄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임금균등화 정책도 수용했습니다. 스웨덴 역시 자본가들이 급진적이며 조직력 높은 노동조합에게 궁지에 몰려 타협을 선택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자본가가 노동조합을 경제적,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조건에서입니다. 자본주의란 자본가만이 경제적 주체가 되는 체계입니다. 노동자의 조직을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은 큰 압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운동이 자본주의를 위협할 만큼 사상적으로, 그리고 조직력으로 위력적일 때야 타협이라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이 충분히 자본가의 반대편에 서는 계급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계급적 단결을 위한 운동이 1990년에 출현했습니다. 사측 포섭전략에 세가 약화되었던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1990년 노조 선거에서 민주파(투쟁파) 집행부가 대거 당선되며 투쟁력을 복구했고, 1988년부터 지역노동조합협의회(지노협)로 결집한 마산창원, 구미, 서울 등의 제조업 중소기업 노동조합들은 1990년 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건설해 조직적 결집을 이뤄냈습니다. 대기업 노동조합들과 전노협이 하나의 조직으로 단결해 투쟁할 수 있었다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정권과 재벌은 둘의 결합을 용납하지 않았는데요. 노태우 정권은 1991년 전노협과 대기업연대회의(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회의)가 공동투쟁을 추진하자 이에 가담한 노조들을 공권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탄압이 거세다 보니 대기업 노동조합 일부는 공개적으로 전노협 가입을 포기했습니다.

1991년 전열을 정비한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전노협과 연대투쟁에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노협과 연대회의가 공동으로 구성한 투쟁 본부는 1991년 5월 1일 노동절을 전면휴무로 선포한 데 이어, 5월 9일 범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하고, 5월 18일에는 한국전쟁 이후에 최초로 총파업도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6월로 넘어가면서 투쟁은 힘을 잃었는데요. 이렇게 1991년 5월 공동투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전노협과 대기업 노동조합의 결합은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전노협은 1991년 말에 조합원 수가 출범 당시의 1/3로 줄었습니다. 불황으로 중소기업에서의 노동조합 투쟁이 어려워진 데다 정권의 탄압까지 집중된 탓이었습니다.

전노협 건설의 모태가 된 1988년 11월 노동자대회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을 전면에 내건 첫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운동은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 그리고 정권과 재벌의 분할 전략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노동조합과 전노협이 힘을 합쳐 노동자의 계급적 진출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정권과 재벌의 분할 관리를 넘어서지는 못했는데요. 그 결과 재벌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은 경제성장률 하락 속에서 힘을 보존했으나, 중소기업 노동조합들은 전노협의 쇠락과 함께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조합의 격차가 임금 격차에도 영향을 주어 OECD 최고 수준의 임금 격차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 전태일 이후 노동운동 2 임금과 고용 격차는 어떻게 커졌는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가 구호로 등장한 2017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금속노동자

민간부분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 조직률은 50%가 넘지만, 민간 100인 미만 기업의 조직률은 1%도 되지 않는다. 전태일의 외침은 정작 그가 일했던 곳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다.

매년 11월 초에 열리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노동자대회”의 구호는 당대 노동운동의 요구를 집약해서 보여줍니다. 외환위기 한복판에서 열린 1998년에는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이, IMF 구조조정이 끝난 후인 2003년에는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노동존중’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1년 차인 2017년에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내걸렸습니다. 1988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요구가 많았다가, 2천년대 이후에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에 대한 요구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는 것에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관심이 이동한 셈인데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의 의미가 이렇게 변화한 이유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부르는 고착화된 임금, 고용 격차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등 모든 부분에서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의 차이가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양쪽 사이에서 일자리 이동도 없는 것이 한국적 격차의 특색인데요. 재벌이란 한국적 자본가의 특성과 기업별 노조란 한국적 노동운동의 특성이 결합해 이런 노동시장 특색이 만들어졌습니다.

재벌과 기업별 노조 체계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건 앞서 봤듯 1990년대부터였습니다. 재벌과 정부는 1987년으로 분출한 노동조합 운동을 기업 내에 가둬두려고 기를 쓰고 탄압을 했습니다. 노동운동은 결국 이 탄압을 극복하지는 못했지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 경제성장률 하락 속에서도 재벌과 정부는 투자를 확

대했습니다. 두 부문의 고용도 증가했지요.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조합 역시 교섭력이 지속해서 커졌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상황이 정반대였는데요. 수익성 하락으로 사업주 지불능력은 작아졌고, 그나마 있던 노동조합들도 탄압으로 힘이 약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부문 간 노동조합 조직률, 교섭력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양상은 2000년대에 더욱 확대되는데요. 노동조합 운동이 이전보다 더 사업장 내부 문제에 집중했던 탓이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더욱이 노동운동이 사회변화에 관한 요구를 만드는 데도 실패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2000년대 사회적 쟁점이 됐던 노동조합 운동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 운동입니다. 2005년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정부의 불법과건 판정을 계기로 정규직화를 내걸고 공장 점거 투쟁을 벌였고, 기아차, 한국지엠 등 대형 제조업체들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격렬한 투쟁을 10년 넘게 벌였습니다. 2007년에는 대형마트 홈에버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트를 점거한 후 2년 가까이 고용승계 투쟁을 벌여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문제가 큰 사회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자제품 수리기사, 케이블 설치기사, 대형마트 같은 민간서비스 부분의 비정규직과 학교, 지자체, 대형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조합들도 2000년대 내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과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구조조정 대응입니다. 2001년 대우차에서는 2천여 명이 정리해고되면서 노동조합이 공장점거 파업을 벌였습니다. 2002년

에는 발전소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이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였고, 2009년 쌍용차에서는 3천여 명이 정리해고된 후, 노동조합이 두 달 넘게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2010년 한진중공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고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크레인 고공농성 돌입과 이에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희망버스’ 운동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13년에는 철도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파업이 20일 넘게 진행됐는데, 박근혜 정부가 철도노조 집행부를 잡겠다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2000년대 노동조합 운동의 특징은 그 격렬함에 비해 제도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의 노동조합 투쟁들에서는 점거파업, 수개월 간의 단식과 고공농성, 사망 사건들, 공권력 투입과 대규모 구속 등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격렬한 갈등이 제도 변화로 이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 투쟁은 기업 내 노사 합의로 정규직화 또는 신규채용 형태로 대부분 마무리됐고, 정리해고 문제 역시 정부 중재로 해고자들이 단계적으로 복직하는 것으로 대체로 끝났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정리해고 관련 제도 개선은 없었죠.

민주노총이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안을 마련해 2004~05년 수차례 총파업을 조직했고, 2010년 노조법 개악 시기에도 총파업을 조직했습니다. 횡수로만 따지면 2000년대 내내 매년 한두 차례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민주노총 총파업은 “뺑파업”이란 비아냥거림을 들을 정도로 위력에서나 조합원 참여에서나 미약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에 위협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총파업 참여가 정부와 재벌에게 경제적 타격을 가할 만큼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데다, 민주노총의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로 총파업이 정치적 압력이 되지도 못한 탓이었습니다.

제도 변화의 실질적 힘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운동은 기업 내에서의 문제해결에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 내에서 문제가 해결 가능한 곳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한정됩니다.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충분해야 투쟁에 비례해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2000년대 노동조합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도, 고용안정과 임금인상도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이 다시 대기업, 공공부문과 나머지의 노동조합 조직률 격차로 이어졌고요. 현재 민간부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조직률은 50%가 넘지만, 민간 100인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1%가 되지 않습니다. 전태일의 외침은 정작 전태일이 일했던 그곳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임금·고용의 연대로, 전태일 정신 계승!



1968년 중부시장에서 일할 때의 전태일

연대가 하나의 노동자의 제도로 자리 잡는 세상을 전태일은 꿈꾸었을 것이다. 2020년의 노동자운동은 이제 그 정신을 보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한다.

역사는 두 가지 의미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우리는 독립된 시간이 아니라 역사의 시간 위에서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 재벌의 역사, 경제개발의 역사가 현재의 사회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둘째, 역사는 여러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1970년 전태일의 선택, 1987년 이후 노동자운동의 선택, 2000년대 노동자운동의 선택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우리에게 전태일은 어떤 역사의 연장선과 시사점을 주고 있을까요?

앞선 글에서 반복해서 봤듯 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노동자의 단결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과 고용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재벌과 맞서 싸워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노동자간 격차를 축소하는 제도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과제를 종합한 것이 바로 “연대임금·연대고용”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대임금, 연대고용을 이해하려면 노동조합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가지는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제도이면서, 동시에 시장을 비판하는 계급 조직이라는 노조의 이중적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노조는 노동시장의 가격제도 역할을 합니다.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실업자(산업예비군)가 없다는 전제에서 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비례해 상승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업 없는 경제는 매우 예외적이며, 있더라도 일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는 항상 실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교섭 열위 상태에서 임금을 결정하며, 임금은 노동생산성보다 상승률이 낮아집니다. 여기서 노조가 역할

을 합니다. 노동자는 노조로 단결하여 임금인상 투쟁을 하고, 노동자의 자본에 대한 교섭 열위 상태를 보정합니다. 노조는 임금이 노동생산성 향상만큼 인상되게 만드는 제도, 다시 말해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 상품을 제값 받고 기업에 팔 수 있도록 만드는 가격제도입니다.

다음으로, 노조는 시장에 대한 계급적 비판자입니다.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시장이 그럭저럭 작동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불황 또는 침체가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해 이윤 감소의 방파제로 삼습니다. 노조가 고용과 임금을 방어하려 해도, 투자와 고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업입니다. 생존을 위해 노동자는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며, 임금을 스스로 삭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노동시장은 불황의 피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실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은 자본이 노동을 지배한다는 그 계급적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불황기의 노조는 조합원 생존권을 지켜야 하기에 시장의 법칙을 그대로 준수할 수는 없습니다. 노조는 시장이 체계적으로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희생을 비판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노조는 이 두 역할을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실업을 줄이는 것으로 결합해왔습니다. 이것이 연대임금·연대고용 정책입니다.

임금 격차 축소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개별적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가능합니다. 현재의 생산력이 노동자 모두가 분업을 통해 함께 만들어낸 것이라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계급적 윤리를 노동자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업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지배는 실업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실업자가 늘면 일자리 경쟁이 격화되

고, 경쟁이 격화되면 임금 격차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연대하지 못하면 노동자계급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날처럼 고용 자체가 사회적 문제인 시대에는 연대임금, 연대고용은 당연히 고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거시적 목표는 비정규직과 실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생산성과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고용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대임금 정책이 중요합니다. 고용에 친화적이며,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와 임금 수준을 만들어야 고용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한 개혁, 고임금 부문의 중장기적 임금 수준 조정,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등 두 부분의 고용 비중 확대에 관한 사회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노조들은 자신의 임금 극대화를 계급적 수사로 정당화하는 전투적 경제주의를 지양해야 합니다. 임금교섭권을 산별노조와 총연맹에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벌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행동도 요구해야 합니다.

연대임금·연대고용에 적합한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데요. 노동조합이 전국적, 산업적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연대의 윤리에 따라 임금과 고용 격차를 축소하려면 여러 국가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패와 내로남불 식 법 적용이 만연한 데 노동조합만 독야청청 공정한 제도로 남아있기는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 노동조합이 사회개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들은 하나 같

이 국가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은 평가를 받는 나라들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 의회 정치의 활성화, 법치의 확립, 노동운동 친화적 정당의 강화 등이 있어야 연대임금·연대고용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태일은 생전에 밥 먹듯이 끼니를 걸러야 했던 어린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를 가슴 아파하며, 차비를 털어서 풀빵을 사주고 동대문에서 쌍문동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집에 가곤 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대하는 삶, 연대하는 조직, 연대가 하나의 노동자의 제도로 자리 잡는 세상을 그는 꿈꾸었을 것입니다. 2020년의 노동자운동은 이제 그 정신을 보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